

# 한국도시부모의 아동복지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Opinions of Parents on Child Welfare in Urban Communities

이 소 희\*

Lee, So Hee

이 재 연\*\*

Lee, Jae Yeon

## ABSTRACT

This research studied common opinions of parents about child welfare that have been diffused into urban communities in Korea. They were analyzed into major dispositions—anti-collectivists, reluctant collectivists, Fabian Socialists, Marxists—by demographic variables of sex, age, education, occupation, income, and religion.

A questionnaire of 18 items was distributed to 1170 parents in the Seoul area who had more than one child under 18 years of age.

The returns of 815 parents were analyzed with the statistics of frequency, percentage, and one-way 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1) The opinions of parents on child welfare in urban communities had tendencies toward Fabian Socialists and reluctant collectivists; (2) Major demographic factors were education and occupation, but the variables of sex, age, income and religion were not significant.

---

\* 신구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 본 연구를 위하여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상관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아동의 最適發達과 健全육성을 기할 수 있는 곳은 일차적으로 家庭이며 따라서 일차적인 양육책임은 父母가 갖는다.

그러나 産業社會이후 종래의 가정에서 父母를 중심으로 수행되던 아동양육기능이 점차 약화, 불가능해져서 이를 補充 혹은 代理할 수 있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의 健全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가 제도적 조치로써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이러한 아동복지의 요구가 증대일로에 있으며 이의 확대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아동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제반여건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아동복지의 接近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는 바로 韓國的 兒童福祉模型의 구축이라는 정책적 과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다시말하면 우리나라 실정에서 적합한 아동복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수단, 즉 정책을 강구해야 됨을 의미한다.

아동복지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의 일영역으로서 그 맥을 같이하는 바, 사회복지정책의 실시와 관계되는 변수는 여러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자와 정책영향자들이 갖는 이념이다(金尙均, 1985) 특히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사회정책의 결정이 근본적으로 선택이라는 사실이 재강조되고 있기 때문에(Higging, 1981)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그 나라의 복지이념은 정책결정자에

크게 좌우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福祉意識에 의해서도 영향받는 바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福祉意識이 福祉國家의 형성과 토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이를 기초로 한 정책형성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의식이 福祉의 수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金泳護, 1980).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의식에 대응한 앞선 정책의 개발이 국민의 복지요구를 자극하여 나태함을 조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制度와 政策이 국민의 福祉意識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따라서 만일 국민의 社會的 慾求가 적절히 충족되지 않는다면 社會問題化할 가능성이 크므로 국민이 가지고 있는 社會的 慾求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側面에서 福祉意識에 관한 조사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아동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兒童福祉意識에 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父母의 兒童福祉意識에 관한 조사는 부모역할의 보충 및 대리기능으로서 국가의 政策方向의 설정과 代體方案의 모색 및 이에 기초한 각종 兒童福祉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兒童福祉 政策的 必要性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도시부모의 兒童福祉意識을 규명하고, 이러한 福祉意識의 형성에 관여하는 변수를 파악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도시부모의 兒童福祉意識의 성향은 어떠한가?

2. 우리나라 도시부모의 兒童福祉意識과 관련있는 변수는 무엇인가?

3. 이러한 변수에 따라 兒童福祉意識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가?

## 2. 理論的 背景

### (1) 兒童福祉政策의 概念

① 兒童의 정의 : 일반적으로 아동이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인간을 총칭하나 專門분야의 입장에 따라 정의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아동복지는 아동의 건전육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수행되는 활동인 바,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에서 그 실사근거를 제공해 주는 兒童福祉法의 규정에 의해 18세 미만의 者로 정의하고자 한다.

② 아동복지정책의 정의 : 張仁協(1985)은 아동복지정책을 아동복지 program을 실시하기 위한 國家의 원칙이라고 하였다. 이때 아동복지란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써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분야와 관련있는 公私團體나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하였다.

朱貞一과 李素希(1984)는 아동복지 對象者의 범주속에 아동의 양육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父母 내지는 家族의 안까지 포함시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아동복지란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家族 및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건전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政府 및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公私團體가 협력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실현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며 도와주는 조직적인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2) 福祉理念의 概念: 福祉理念을 福祉와 理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rshall(1976)은 福祉를 물질적 수단과 비물질적 목표의 총합체라고 정의하면서 이는 富와 행복사이를 잇는 축의 어느 한지점에서 存在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복지를 이와같이 추상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보다도 福祉國家의 출입말로 파악할 때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고 하였다(金尙均, 1985) 다시 말하면 복지국가란 국가 安保차원에서 평화상태, 政治制度로서의 民主主義, 경제제도로써 혼합경제체계(資本主義), 복지제도로써 社會福祉라는 최소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 이념이란 개인, 집단 및 문화의 특성을 규정짓는 사고방식이나 사고내용으로써, 이러한 사고의 방향을 결정짓는 心性의 바탕은 價値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福祉와 理念을 연결시켜 정의해 보면 福祉理念이란 복지국가를 보는 視覺으로 정의할 수 있다.(金尙均, 198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이한 복지이념은 상이한 가치관에서 형성되어지며, 이러한 상이한 복지이념은 福祉模型의 설명에서 사용되는 비교와 대조의 방법에 의존하여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Thones, 1966)

(3) 福祉模型: 복지모형이란 이념의 동일성 및 상이성에서 파생되는 사회정책의 제 규범적 논리를 수개의 집합으로 구분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같은 복지모형을 형성시키는 이념적

갈등은 社會價值,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의 역할, 빈곤에 대한 개념, 국가자원에 대한 배분, 낙인(Stigma),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국가자원의 낭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金尙均, 1983) 이와같이 복지모형을 산출해내는 이념적 갈등에 따라 福祉國家論者들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이념적 모형을 다양하게 분류하였는바 이를 중심으로〈표1參照〉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sup>

〈표 1〉 복지모형

年度	學 者	理 念 的 連 續 線			
		自由放任主義	自由民主主義	社會民主主義	社會主義
1958	Wilensky & Lebeaux	殘 餘 的	制 度 的		
1971	Pinker	殘 餘 的	制 度 的		
1972	Donnison	理 性 的 經濟志向性右派	感 性 的 社會志向性左派		
1974	Titmuss	殘 餘 的	產業的成就 및 業績型	制度的 再分配型	
1975	Parker	自由放任的	自由主義	社會主義	
1975	Butterworth & Holman	殘 餘 的	制 度 的		
1976	George & Wilding	反集合主義者	現實的集合主義者	페비안 社會主義者	마르크스 主義者
1977	Mishra	殘 餘 的	制 度 的		規 範 的
1977	Furniss & Tilton	積極國家型	社會保障國家 型	社會福祉國 家型	
1979	Room	市場自由主義者	自由主義者		新마르크 스主義者
1982	鄭弘翼	自由福祉主義	普遍的 社會保障主義	福祉 國家主義	

註1) 복지모형에 관한 논의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二分法, 三分法, 四分法으로 나누어 지나 四分法이 제 관점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George & Wilding(1976)의 이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自由放任主義: 이 복지모형이 내세우는 근본가치는 自由, 個人主義, 不平等으로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자유란 강제의 不左로서 개인이 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의 행동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만큼 자유롭다면 그 자신과 국가를 위하여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어떠한 政府의 施策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의 개입이나 강제에 의해 풍요로와지기 보다는 차라리 가난하면서 자유로울 것을 주장한다. 또 人間의 地位나 所得은 그 자신의 能力과 勞力에 의해 영향받으므로 不平等은 정당화되며, 이러한 側面은 경제성장애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본다. 즉 經濟的으로는 私有財產制度, 營利追求, 自由競爭의 원칙이 지배하며, 국민경제질서는 Smith의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므로 국가는 이러한 경제체계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경제성장과 富의 극대화에 최대의 가치를 부여하며, 所得, 教育, 의료서비스 및 施設保護의 형태는 생산제도에 의해 左右되고 국가개입은 극히 최소한에 그치되 資產調查 (means test)에 의한다.

즉 국가의 역할은 경제질서가 市場을 통해서 조정될 수 없거나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서 政治的인 경로를 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로 제한된다. 또한 失業은 나태에서 비롯된다고 보므로 최악시되며 따라서 自助와 自立이 강조되고 문제의 해결은 개인이 지며 빈민구제의 책임도 私設機構나 慈善團體에서 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국가는 다음 3가지 방향에서 그 축소가 요구되어지는데 1) 社會奉仕의 範圍 및 援助對象者의 축소, 2) 서비스수준의 低下 3) 사회봉사에서의 行政管理의 방향을 中央에서 地方으로 또는 政府에서 民間으로 하여 개인주의와 자유를 더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議會民主主義를 고수하나 國家는 治安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Lassalle 말하는 소위 夜警國家의 기능에 머문다.

② 自由民主主義: 이 복지모형이 내세우는 근본가치는 自由, 個人主義, 競爭의인 私企業의 강조, 自助로서 자유방임주의와 비슷하지만 知的 實用主義에 의하여 다소 조건적이고 제한적이다.

여기에서의 자유란 政府의 독단적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함과 동시에 결핍, 불평등 및 社會惡으로 인한 經濟的 예측으로부터의 자유도 포함된다. 그러나 평등주의자는 아니다.

이것은 자본수익가 自立規制의이지 못하고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자원의 배분을 잘못하여 스스로 不義와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정부개입이 유익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기초가 되는 것은 知的 實用主義, 즉 人間の 理性的 思考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自由市場制度의 신념 때문에 政府의 役割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즉 政府의 가장 중요한 役割은 국민개 개인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활동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개 개인의 外部에 놓여있는 기능, 다시말하면 정부이외 누구도 行할 수

없는 기능에 관한 것으로 이때의 扶助는 最低 수준으로 제한된다. 왜냐하면 이 입장에서 사회정책의 원리는 국민들로부터 모든 책임을 제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자신과 가족이 最低生活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그의 능력을 助長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政府의 役割은 현저한 社會惡의 해소, 社會不平等의 완화, 社會福祉計劃에서의 우선순위결정, 민간기업의 조장에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 민간복지, 社會保險, 국민최저 수준의 사회복지사업의 실시를 주장한다.

政治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하에서 사회개혁을 그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③ 社會民主主義 : 이 복지모형이 내세우는 중심가치는 平等, 自由, 友愛이며 파생적 가치로 人道主義를 들 수 있다. 平等이란 사실상 모든 사회이론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가치이다. 즉 사회적 조화, 사회적 효율, 사회적 정의 및 개인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여 자아실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사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불평등은 능력보다도 기회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그리고 友愛라는 것은 競爭보다도 행동, 권리보다는 의무, 개인보다는 共同體의 품을, 자조보다는 利他心을 강조하는 것의 총합체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로서 인도주의는人間이 어떠한 범주내에서는 자신의 몫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어떠한 社會的 불안도 가능한 한 일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人道主義는 社會成長에 관한 태도에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즉 경제성장보다 사회적 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사회적 장은 교육적으로 正常兒童보다 障礙兒童에게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일반적인 질병을 가진 兒童보다 만성질환을 가진 兒童에게 더 많은 의료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관점은 수정자유주의에서처럼 자본주의가 자기규제적이지 못하고, 빈곤을 해소시키지 못하며 이로 인해 부의 불평등을 야기시킨다고 본다. 즉 자유시장제도의 실패로부터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찾는다.

따라서 국가는 부족한 생활상태에 놓여 있는 者에 대한 사회적 援助를 중요시 여기며, 분배정책을 통해서 사회적평등을 실시하여 복지국가를 이룩하려고 한다.

이러한 側面에서의 福祉國家는 社會經濟的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의한 社會政策이 산업사회에 의해 파생된 욕구와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본다.

때문에 가족의 역할과 기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사회통합, 공동체 의식 및 이타주의를 유지시켜야 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

④ 社會主義 (마르크스주의) : 마르크스주의도 自由, 平等, 博愛를 근본가치로 하고 있지만 민주사회에서 사용되는 견해와는 다르다.

자유란 단순한 제제의 부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어떤 특권의 존재하에서도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다시말하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하는 것보다 무엇에 대한 자유인가 하는 것이며, 실제로 經濟的 平等이 따르지 않는 정치적 平等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평등이란 개인의 利害와 지역사회의 이해를 타협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것에 의해 우애로와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적인 側面에서 강력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생산제도의 國有化는 정당화된다. 왜냐하면 자원의 배분이 成就度기준이 아니라 要求度기준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要求에 대한 국가책임, 즉 무료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이다.

정치는 급진적인 사회개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며 자본주의체제의 종식이 사회의 평등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으며 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 : 본 연구는 兒童福祉法에 규정한 바의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모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복지의식은 각 사회계층에서 고루 표출되어야 하므로 층화표집하였다.<sup>2)</sup>

즉 서울시 각 구에서 상류, 중류, 하류계층을 대표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유치원, 새마을 유아원, 국민학교, 중학교를 1개교씩 선정한 다음 <표 2>와 같이 해당 교육기관의 학부모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조사대상자는 상,중,하류계층 각 390명으로 총 1170명이다.

### 3. 研究方法

본 연구는 설문지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

< 표 2 > 조사대상자

교육기관	계 층	하 류 계 층	중 류 계 층	상 류 계 층	계
유 치 원			동대문구 창신동 소재 D유치원 85名 성동구 중곡동 소재 T유치원 45名	강동구 문정동소재 O유치원 (현대 APT 단지내) 130名	
새마을 유아원	강동구거여동소재 G새마을유아원	130名			
국 민 학 교	강동구 거여동 소재 O국민학교	130名	성북구 장위동 소재 T국민학교 130名	용산구 동부이촌동 소재 S국민학교 130名	
중 학 교	동대문구 번복동 소재 M중학교	130名	성북구 휘경동 소재 H중학교 130名	강남구 학동소재 O중학교 130名	
계		390名	390名	390名	1170名

註 2) 층화표집의 근거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식변수라고 간주되는 교육, 직업, 소득(金洙謨, 1980)의 세 변수를 본 연구자가 조합하여 거주지역의 특성으로 단일화하였다. 즉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역은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고, 서울시 교육위원회 장학사의 자문과 해당교육기관 교사의 견해를 종합하여 연구자가 승意하여 지역을 선정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묻는 6가지 일반분항과 아동복지의식을 묻는 18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분항에서 職業은 한국표준직업분류(홍두승, 1983)을 참고하였으며 收入은 1986년도 도시가계 소득 10分位(국세청)을 3등분으로 축약하여 상, 중, 하의 3계층으로 나누었다.

아동복지의식에 관한 문항은 前章에서 기술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아동의 基本權保障이라는 차원에서 Ellen Key의 6가지 기본권과 Thones(1966)의 6가지 이념갈등을 George & Wilding(1976)의 복지모형에 교차시켜 <표 3 참조> 각 문항당 이러한 이념을 나타내는 4가지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 표 3 > 문 항 구 성

아동권 이념 갈등	튼튼하게 태어날 권리	정상적 가정생활 을 누릴 권리	건전하게 키워질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도덕적 정신적 훈련을 받을 권리	휴식·오락을 즐길 권리
사회가치	출산 휴가에 대한 태도		상속세의 실시에 대한 태도		학대 아동 부모에 대한 대책	
빈곤에 대한 개념		저소득층 취업모성의 자녀양육대책			비행 청소년의 선도 대책	빈곤 가정 아동을 위한 주택공간 확보 방안
국가의 역할		저소득층 실직父의 자녀 양육 대책	아동복지 관련 민간 단체의 역할에 대한 태도			아동놀이터 시설의 확대 설치 방안
국가자원의 배분	아동의료 대책의 방법		인구정책에 대한 태도	국,공,사립국 민교의 병존에 대한 태도		
국가자원의 낭비	의료시설의 도시 집중 개선 방안			유아교육의 확충 방안		아동 휴양시설의 차등입 장료 징수에 대한 태도
낙인 (stigma)		빈곤가정의 생계 지원을 위한 자 산조사 실시에 대한 태도		장애아 특수 교육의 확대 방안	미혼모의 자녀에 대한 건강 관리 책임	

이러한 側面에서 구성된 18문항은 아동복지분야에서 이념의 상이함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으며, 비교적 복지의식의 표출이 선명한 것으로 선정하였다.

복지모형에서 四分法을 사용한 것은 이 복지모형의 분류가 가장 포괄적이며 정책주체의 기능과 책임범주를 가장 잘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사도구의 문항판별력과 문항신뢰도를 예비조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표4 참조). 문항판별력은 문항당 제시된 4가지의 질문이 4가지의 이념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성향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시된 4가지의 질문을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順으

로 4,3,2,1의 번호를 매기게 하여 검증하였는 바 89.2%의 판별력을 보였다.

문항신뢰도는 半分法을 사용하고 이를 Spearman Brown 공식에 의해 訂正한 결과 0.64의 신뢰도 계수를 얻었다.

### (3) 조사절차

① 예비조사 : 조사도구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표4>에 제시된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 바, 총 88명이 응답하였다. 이 결과 문항판별력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의 구분에서 판별의 오류가 있어 보완, 수정하였다.

<표 4> 예 비 조 사 자

계 총	상 류 계 총	중 류 계 총	하 류 계 총	계
소재 및 대상자	중구명동소재 G국민학교 35명	동대문구 휘경동소재 H중학교 35명	강동구 거여동 소재 새마을유아원 35명	105명

일반사항에서 응답자의 79%가 어머니로 나와 아버지도 답변할 수 있도록 첨언하였다.

또 직업분류에서 무응답자가 많았으므로 이는 분류상의 곤란으로 판단하여 응답자가 직접 직업을 기입케 하고 이후 연구자가 분류하도록 보완하였다.

② 본조사 : 본 조사는 1987년 4월 15일~22일까지로써 해당교육기관의 담당교사를 통해 학부모에게 배부하였으며 이를 회수하는 방식을 택했다.

복지의식의 측정을 위한 통계적 방법은 단 순빈도, 백분율과 1~4점의 가중치에 의한 평균을 이용하였으며 복지의식에 관련 있는 변수의 발견을 위해서는 ONE-WAY AN-OVA 검증을 하였으며 SAS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 4. 結果 및 解釋

### (4) 자료분석방법

前章의 연구방법에 의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총 1170명 중 815명의 질문지가 회수되었다. 무응답의 분포가 다양하여 문항별 분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① 조사대상자의 성별구성은 < 표 5 >와 같이 아버지가 56.5%로 어머니의 38.7% 보다 많다. 이것은 설문지상에서 아버지가 응답하도록 첨언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 표 5 > 조사대상자의 성별구성

내 용	구 분	N (%)
성별구성	남	461 (56.5)
	여	315 (38.7)
	무응답	39 (4.8)
	계	815 (100.0)

② 조사대상자의 연령구성은 < 표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49세, 50-59세, 20-29세, 60-69세의 順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의 자녀가 유치(아)원에서 중학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 표 6 > 조사대상자의 연령구성

내 용	구 분	N (%)
연령구분	20 — 29 세	25 (3.1)
	30 — 39 세	329 (40.4)
	40 — 49 세	384 (47.1)
	50 — 59 세	57 (7.0)
	60 — 69 세	5 (0.5)
	무응답	15 (1.8)
	계	815 (100)

③ 조사대상자의 교육정도는 < 표 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졸, 고졸, 중졸, 국졸의 順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과 아버지의 응답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 표 7 > 조사대상자의 교육정도

내 용	구 분	N (%)
교육정도	국 졸	41 (5.0)
	중 졸	119 (14.6)
	고 졸	276 (33.9)
	대 졸	364 (44.7)
	무 응 답	15 (1.8)
	계	815 (100)

④ 조사대상자의 직업구성은 < 표 8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문직이 27.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무응답인데 이는 실제 169명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主婦인 家事종사자로서 실제 무응답은 21명이었다. 그 다음이 판매직, 사무직, 생산직 및 행정관리직 순이다.

< 표 8 > 조사대상자의 직업

내 용	구 분	N (%)
직업구분	전 문 직	255 (27.6)
	행 정 관 리 직	73 (9.0)
	사 무 직	106 (13.0)
	판 매 직	118 (14.5)
	생 산 직	103 (12.6)
	무 응 답	200 (23.3)
	계	815 (100.0)

⑤ 조사대상자의 수입정도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만원 이하가 36.8%로 가장 많고 다음이 40~80만원 사이로 32.3% 80만원 이상이 22.6%로 제일 낮았다. 이는 통상적으로 직업의 유형과 수입은 비례하여 전문직일수록 수입이 높는데 본 조사에서는 다소 어긋나고 있다. 그러나 수입의 수준별 분포는 86년도 가계소득분포와 비슷하다.

<표 9> 조사대상자의 수입정도

내용	구 분	N(%)
수 입 정 도	40 만원 이하	300( 36.8)
	40 ~ 80 만원	263( 32.3)
	80 만원 이상	184( 22.6)
	무 응 답	68( 8.3)
	계	815(100.0)

⑥ 조사대상자의 종교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독교와 無敎가 2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불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의 순서로 나타나 한국의 종교인구 구성비와 비슷하다.

<표 10> 응답자의 종교

내 용	구 분	N(%)
종 교	기 독 교	235 (28.8)
	불 교	183 (22.5)
	원 불 교	4 ( 0.5)
	유 교	18 ( 2.2)
	천 주 교	102 (12.5)
	무 교	235 (28.8)
	무 응 답	38 ( 4.7)
	계	815(100)

## (2) 조사대상자의 아동복지의식

본 조사대상자의 아동복지의식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는<sup>3)</sup> 제시된 4가지의 질문에서 자유방임주의 형을 택하면 1점, 자유민주주의형을 택하면 2점, 민주사회주의형은 3점, 사회주의형은 4점, 加重値를 주었다. 또한 복지모형이란 것은 원래 각각의 상이한 모형이 상호배타적으로 구분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인 비교개념으로서 이념의 연속선상에 갖가지의 모형을 위치시킨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18문항의 종합적 분석 및 각 문항별 분석에서 평균점수가 1 ~ 1.75점 사이이면 자유방임주의로, 1.76 ~ 2.5점 사이이면 자유민주주의로, 2.51 ~ 3.25점 사이이면 민주사회주의로, 3.26 ~ 4.0점 사이이면 사회주의로 설정하였다.

이결과 총 815명의 응답자가 표출한 아동복지의식은 <표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표 11> 문항별 아동복지의식 평균치

문항	표본수	평 균	문항	표본수	평 균
1	807	2.467	10	802	2.637
2	807	2.154	11	801	2.777
3	805	2.453	12	806	2.166
4	802	2.539	13	774	2.511
5	808	3.018	14	802	2.850
6	800	1.890	15	794	2.799
7	809	3.011	16	801	2.901
8	804	2.853	17	805	3.120
9	805	2.817	18	796	2.475
총 평 균					2.641

註3) 분석 방법은 한국대 학생의 복지 의식을 연구한 金尙均(1985)의 방법을 원용하였다.

같이 총평균 2,641로서 자유민주주의에 가까운 민주사회주의의 성향을 나타내었다. 즉 아동복지문제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비중있게 의식하며 적극적인 국가의 관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민주사회주의가 12 문항, 자유민주주의가 6 문항으로서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주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복지이념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평균치가 3.0 이상으로서 민주사회주의 성향을 보인 것은 3 문항으로서 이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은 國·公立 및 私立國民學校의 共存에 대한 의식으로 <표12>와 같다. 즉 현재의 國·公·私立 국민학교의 공존에 무리가 없다는 비율이 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國·公立 學校가 중심이 되고 이를 위해 국가예산을 확

< 표 12 > 국·공·사립국민학교의 공존에 대한 태도

가중치	구 분	표본수	백분율	평 균
1	사립학교 중심, 국민가정아동의 학비보조	40	5	
2	사립학교 육성, 특수지역 국·공립 학교설치	113	14	
3	국·공·사립의 공존, 국민가정아동 학비보조	362	45	
4	국·공립 학교중심, 국가예산확대	290	36	
합계		805	100	3,120

대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성향이 36%로 나타났다.

사실 義務教育의 확대 및 質的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던 사립국민학교가 不正的인 운영 관리로 인해 한때 폐지론까지 등장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지만 (閔丙順, 1975) 1975년 이후부터는 사립학교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존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합의에 부모도 동의하는 것 같다.

실제 국민학교 교육은 국민생활의 기초교육으로서 自國의 정치이념에 별 관계없이 국가 주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사립 학교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 나타난 바와 같이 사립 학교의 폐지 및 국·공립 학교에 대한 국가예산증액을 요구하는 사회주의 성향이 두번째로

높아 36%를 보인 것은 교육세의 징수, 육성회비의 납부등으로 완벽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는데 기인하는 것 같다.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학생 1인당 사용되는 公教育費가 300 \$ 정도로 같은 정치이념을 가진 日本의 1400 \$에 비교도 안 되는 실정으로 예산증액의 건의도 나오고 있다.(鄭範謨, 1987)뿐만 아니라 제 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기간중 教育投資優先 順位에 관한 연구에서도 初等教育의 내실화가 4位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도 (尹正一外, 1980)미루어 알 수 있다.

다음 두번째로 높은 민주사회주의 성향을 보인 것은 幼兒教育의 확대방안으로 <표13>과 같다.

〈표 13〉 유아교육의 확대방안

가중치	구	분	표본수	백분율	평균
1	유아교육은 부모소관, 국가개입 불필요		49	6	
2	사립유치원의 활성화, 조세혜택 부여		97	12	
3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는 불필요				
	부모의 요구시 새마을유아원 확대		452	56	
4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		210	26	
합계			808	100	3.018

즉 아직까지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는 원하지 않고 있으며, 부모의 요구가 있을시 취업모성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유아원의 확대를 원하는 것이 53%로 가장 높다.

유아교육기관의 취원율은 국가의 개입정도 내지 지원에 영향받는 바 큰데, 국가적 개입과 지원이 높을수록, 또 공립기관의 비율이 사립기관의 비율보다 높을수록 취원율이 높다(韓國教育開發院, 1983)

실제 사회주의 국가의 취원율이 민주주의국가보다 높으며, 역사적으로도 유아교육의 公教育化는 국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金英玉, 1980) 즉 우리나라도 1981년 이후부터 강력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에 의하여 급격한 취원율을 보여온 것도 그 예의 하나다.

본 조사결과에서 26%가 의무교육을 원하

고 있으나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교육투자우선순위 연구에서는 유아교육의 보편화방안이 총 10 항목중 7순위로 제시됨으로써(尹正一外, 1980) 아직은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취원율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책수준은 자유방임 내지는 자유민주주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金成天, 1984) 유아교육의 質的 향상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 3번째로 높은 민주사회주의 성향을 보인 것은 빈곤지역의 아동놀이시설 확대방안으로서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 정부 예산증액을 통해 놀이시설의 확대를 원하는 비율이 6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의한 확대설치를 원하나 그 차이가 심하다.

〈표 14〉 빈곤지역 아동놀이시설 확대 설치방안

가중치	구	분	표본	백분율	평균
1	현재로서는 대책 없음		40	5	
2	지역사회 유지의 협조		89	11	
3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중앙정부 지원		502	62	
4	국가적 예산증대 설치		178	22	
합계			809	100	3.011

사실 빈곤지역 아동들은 동네골목과 집안에서 주로 놀고 놀이시설의 이용은 불과 10% 미만으로 나타나 이 지역에서의 시설확충이 촉구되어 왔다(李承陽, 1982)

이는 본 조사결과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택지조성, 공영주택의 건설, 아파트 건설등의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垞地의 높은 가격은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민주사회주의 성향을 보이지만 평균점수가 3.0이하인 것으로서 전체 순위가 4번째로 나타난 것은 就業母性的 出產休暇에 대한 태도이다. <표 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就業母性에게 2개월정도의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는 사회주의 성향이 46%로 가장 높으나 이에 못지않게 1개월정도의 有給休暇를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성향도 36%로 나타나 두 이념의 공존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 표 15 > 출산휴가에 대한 태도

가중치	구	분	표본수	백분율	평균
1	고용주와 종사자간의 문제		80	10	
2	모든 취업모성에게 1개월	유급휴가	288	36	
3	모든 취업모성에게 2개월	무급휴가	64	8	
4	모든 취업모성에게 2개월	유급휴가	369	46	
합계			801	100	2,901

이는 출산휴가를 권리보여 無給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무원과 교사가 그 主對象이 되는 자유방임 내지는 자유민주주의 성향의 현행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5번째의 민주사회주의 성향을 나타내 보인 것은 빈곤가정의 아동을 위한 住居공간의 확보방안으로서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력없는 가족부터 有科貸貸을 제공해야 한다는 성향이 6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자유민주주의 성향으로서 경제력이 있는 가정부터 국가가 補助해야 된다는 것이 18%로 나타났다.

사실 빈곤지역의 주거문제와 이러한 주거공간이 아동발달에 영향하는 바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金環姬, 1984, 李承陽, 1982) 본 조사결과는 수익자가 부담을 하되 諸조치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1차대상은 빈곤계층이다.

본 조사결과는 주거공간을 이용하는 당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계층을 고려한 여러 조치는 국가적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일차적 대상자는 빈곤계층이다.

〈 표 16 〉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방안

가중치	구분	표본수	백분율	평균
1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	44	5	
2	경제력 있는 가정부터 국가보조	144	18	
3	경제력 없는 가정부터 유료임대주택 제공	502	62	
4	경제력 없는 가정부터 무료임대주택 제공	114	14	
합계		804	100	2.853

다음 6번째로 민주사회주의 성향을 보인 것은 아동휴양시설에서의 入場料의 차등징수에 대한 태도로서 〈표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한 무료개방이 응답자의 44%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이 모든 아동에 대한 차등징수를 원하는 것이 41

%로 비슷하다. 즉 자유민주주의 성향과 사회민주주의 성향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공존에 대한 양극적인 태도는 휴양시설이라는 문화적 관점이 내재되어 있으며 입장료의 金額이 과히 부담스럽지 않는 것에 연유된 것으로 해석된다.

〈 표 17 〉 아동휴양시설의 차등입장료 징수에 대한 태도

가중치	구분	표본수	백분율	평균
1	이용자 부담원칙	72	9	
2	모든아동대상, 연령별 차등 징수	329	41	
3	빈곤 아동만 무료, 연령별 차등 징수	48	6	
4	모든 아동대상, 무료개방	353	44	
합계		802	100	2.850

다음 7번째의 민주사회주의 성향을 보인 것은 저소득층 취업모성의 자녀양육 대책에 관한 방안으로서 〈표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職場內에 託兒施設을 설치하고 이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성향이 37%로 가장 높으나 이에 못지않게 모든 취업모성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託兒施設을 설치해 주기를 원하는 사회주의 성향도 35%나 되어 빈곤자녀뿐만이 아닌 모든 취업모성의 자녀양육을 국가의 책임범주에 넣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취업모성의 자녀양육을 주제로 한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시(張英姬와 李素希, 1982; 李承陽, 1982; 李暎, 1986) 취업모성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계층에 상관없이 자녀양육으로 나타났음을 미루어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은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비슷한 수준으로 양립되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표 18〉 저소득층 취업모성의 자녀양육 대책

가중치	구 분	표본수	백분율	평 균
1	가정에서 부부가 해결할 문제	65	8	
2	직장내 탁아시설 설치, 세제혜택 부여	298	37	
3	빈곤자녀대상 탁아시설의 국가설치	161	20	
4	모든 취업모성 대상 탁아시설의 국가설치	281	35	
합계		805	100	2.817

이는 관련연구에서도 상치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임숙재, 1985) 즉 탁아시설의 비용부담은 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담해야 된다는 자유방임 내지는 자유민주주의 성향을 보이면서 탁아시설의 주체는 국가 내지 非營利團體여야 한다는 민주사회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8번째로 민주사회주의 성향을 보인

것은 아동을 위한 의료대책의 방안으로서 〈표 1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이 의료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향은 5%에 불과하고 현행제도의 유지, 즉 의료보험과 빈곤가정 및 보호시설에 수용보호되고 있는 아동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의 공존상태를 유지 하되 의료보험대상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이 36%로 가장 높아 민주사회주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19〉 아동의료대책 방안

가중치	구 분	표본수	백분율	평 균
1	의료문제는 개인책임, 현행제도 폐지	36	5	
2	현행제도 유지	278	35	
3	현행제도 골격유지, 의료보험 대상자 확대	289	36	
4	현행제도폐지, 모든 아동을 위해 의료세신설	191	24	
합계		794	100	2.799

그 다음으로 현행제도의 유지가 35%로 대 동소이다. 그러나 모든 아동들을 위해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주도의 의료정책 실시 를 원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성향도 24%나 된다.

이는 아직도 의료보험의 皆保險化가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9번째로 민주사회주의 성향을 보인 것은 의료시설의 도시집중 개선방안으로서 〈표

2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성향이 52%로 가장 높으나 다음으로 높은 것은 의료시설의 國·公立化로 분산배치는 원하는 사회주의 성향이 32%로 양립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아동의료대책방안과 비슷하게 공존현상을 보이면서도 훨씬 자유민주주의의 색채가 강하다.

〈 표 20 〉 의료시설의 도시집중화 개선방안

가중치	구 분	표본수	백분율	평 균
1	현상태로 낙관적	13	2	
2	농·어촌지역 의료시설 설치에 대한 혜택부여	413	52	
3	농·어촌지역에 국립의료시설의 집중설치	114	14	
4	의료시설의 국·공립화 및 분산배치	261	32	
합계		801	100	2.777

관련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는 大學生으로 상이하나 자유민주주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金尙均, 1985), 사회주의적 성향은 본 조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육성의 책임문제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종합적인 아동복지의식의 평균치인 2.64보다 낮으면서 10번째 민주사회주의 성향을 보

인 것은 저소득층 失職家長의 자녀양육대책 방안으로서 〈표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完全雇傭政策의 실시를 원하는 민주사회주의 성향이 6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빈곤가정에 국한하여 학비보조를 해주는 자유민주주의 성향이 22%로 나타났다.

〈 표 21 〉 저소득층 실직부모의 자녀양육대책

가중치	구 분	표본수	백분율	평 균
1	실직은 자기책임, 국가개입불필요	65	8	
2	빈곤가정국한, 자녀양육비보조	177	22	
3	완전 고용정책 실시	544	68	
4	자본주의 체제 포기	16	2	
합계		802	100	2.637

이는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나 그렇다고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18개 문항에서 제시된 4가지 질문중에서 가장 낮게 사회주의성향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표2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1번째의 민주사회주의 성향을 보여주었으나 자유민주주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兒童福祉關係 民間團體의 役割에 관한 문

항이다.

즉 아동복지활동에 있어서는 국가주도를 빈간주도보다 더 원하고 있으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당히 빈간주도의 아동복지활동을 펴왔으나 실제적으로 自國의 노력이라기 보다는 外授의 도움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인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제 대부분의 外授이

〈표 22〉 아동복지관계 민간단체의 역할

가중치	구	분	표본수	백분율	평균
1	1차 아동복지 책임은 부모, 국가책임 축소		54	7	
2	국가의 복지활동 현재수준유지, 민간단체의 활동증진		294	38	
3	국가의 복지활동 확대, 민간단체활동 현재수준 유지		325	42	
4	아동복지는 국가의 책임		100	13	
합계			774	100	2.611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러 自生的 福祉活動이 시급한 실정이다.

복지사회를 향한 한국적 복지모형의 개발 논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서는 민간주도형 복지를 실현, 발전시키기 어렵고 적절한 국가적 노력과 개입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는 보고는(金尙均, 1986) 본 조사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다음은 12번째로 민주사회주의 성향이나 가장 자유민주주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非行靑少年에 대한 선도대책이다. 〈표 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단위의 건전오락시설 확대와 이를 위한 정부의 예산 증액요구가 5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입시위주로 교육개선 및 道德教育의 비증강화가 28%로 나타났다.

〈표 23〉 비행청소년 선도대책 방안

가중치	구	분	표본수	백분율	평균
1	부모책임하에 선도		96	12	
2	입시위주의 교육개선, 도덕교육의 비증강화		225	28	
3	지역단위의 건전오락시설 확대와 정부예산 증감		433	54	
4	청소년 여가활동의 강제화		48	6	
합계			802	100	2.539

비행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연구에서 비행의 책임은 청소년 자신과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즉 자유민주주의 내지는 민주사회주의형에 기울어져 있으나 이들이 원하는 대책방안은 여가 및 휴양시설을 사회에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金泳護, 1986) 본 조사연구 결과와 동일한 수준으로서 정책방향의 유사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문항별 평균치가 2.51~3.25에 해당하는 민주사회주의형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다음은 자유민주주의 성향을 나타낸 6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표 2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빈곤가정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資產調査(means test)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태도이다.

〈 표 24 〉 빈곤가정의 생계지원을 위한 자산조사실시에 대한 태도

가중치	구분	표본수	백분율	평균
1	최소의 도움을 주기위한 자산조사 실시	130	16	
2	철저한 자산조사의 실시	241	31	
3	자산조사 실시가 필요없는 복지제도 실시	342	43	
4	부의 평등화를 위한 사회개혁	83	10	
합계		796	100	2.475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괜찮은 복지제도를 실시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43%로 가장 높으나, 어떠한 형식이던 자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 내지는 자유민주주의 성향이 47%나 된다.

이 자산조사는 受患者를 중심으로 한 Stigma (낙인)와 관련된 문제인 바, 公의 扶助制度를 중심으로 살펴본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Stigma를 많이 느끼는 사람조차도 계속해서 扶助를 받기를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公의 扶助에 있어서는 Stigma가 부조신청을 제한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함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李慧京, 1984)참고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자유경쟁에 의한 경제체제의 유지 및 부조대상에서 選別主義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두번째로 자유민주주의 성향을 높게 표출한 것은 人口政策에 대한 태도로써 〈표 2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제도에 대한 찬성이 52%로 가장 높으나, 이에 못지않게 각종 혜택의 부여를 배제하고 부모에 대해 계몽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는 자유민주주의 성향도 41%나 된다.

〈 표 25 〉 인구 정책에 대한 태도

가중치	비고	표본수	백분율	평균
1	자녀출산은 부모소관, 국가개입 불필요	56	7	
2	각종 혜택부여의 배제, 부모에 대한 계몽강화	331	41	
3	혜택부여의 현행제도 찬성	403	50	
4	자본주의 체제 폐지	16	2	
합계		807		2.467

최근의 家族計劃事業評價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 인구감소정책에 과연 도움을 주고 있는가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을 볼 때 (人口問題研究所, 1984) 본 조사결과는 참조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세번째로 높은 자유민주주의 성향을 보인 것은 〈표 2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障礙兒童에 대한 교육확대방안으로써 社會福祉法人의 육성을 통해 확대시키되 정

〈 표 26 〉 장애 아동의 교육확대 방안

가중치	구 분	표본수	백분율	평 균
1	부모가 해결하도록 국가에서 장려	35	4	
2	특수교육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육성, 각종 세제혜택	454	56	
3	특수교육을 위한 장애수당제도 실시	224	28	
4	국가 책임에 의한 무료특수 교육	92	12	
합계		805	100	2.463

부가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원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성향이 56%로 가장 높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들의 特殊教育을 담당하는 교사는 特殊教育에 대한 정부의 行財政的 지원이 가장 先決되어야 한다고 보는 (李相春外 1980) 민주사회주의 성향과는 차이가 있다.

다음 4 번째로 자유민주주의의 성향을 보인 것은 虐待父母에 대한 대책으로서 〈표 2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父母教育을 통하여 해결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72%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높은 것은 학대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나 14%에 불과하다.

〈 표 27 〉 학대아동의 부모에 대한 대책

가중치	구 분	표본수	백분율	평 균
1	부모의 소관, 부모가 책임하에 해결	69	8	
2	부모교육 실시	583	72	
3	학대부모 고발센터의 설치, 전문적 서비스실시	113	14	
4	학대유발 근본원인의 국가해결	43	6	
합계		806	100	2.166

1979 년도에 韓國社會福祉協義會에서 아동 학대 고발센터를 개설하였다가 그 이듬해 폐쇄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어도 아동양육방식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을 부모의 아동양육책임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으로 본다면 긍정적이나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그릇된 兒童觀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아동복지를 위해서 우려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5 번째 자유민주주의의 성향을 보여준 것은 相續稅 실시에 대한 태도이다. 〈표 2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속세를 현재보다 인하하되 더욱 철저한 실시를 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성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상속세의 인상으로 24%, 상속세의 폐지가 23%로 비슷하다. 종합하면 상속세의 폐지 및 인하가 69%로써 자유방임내지 자유민주주의의 색채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관련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 표 28 〉 상속세 실시에 대한 태도

가중치	구분	표본수	백분율	평균
1	부모의 상속권 인정, 상속세 폐지	184	23	
2	상속세율의 인하 및 철폐 실시	371	46	
3	상속 세율의 인상	196	24	
4	상속재산의 국가 환수	56	7	
합계		807	100	2.154

즉 도시빈곤가정을 대상으로 한 빈곤의 원인연구에서 부모의 遺産이 없어서가 35.5%로 나온 것을 보면(李承陽, 1982) 상속 및 자유 경쟁체제에 의한 私有財産의 인정 및 지분에 대한 自律性的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다음은 가장 자유방임주의에 가까운 자유민주주의의 성향으로 평균 2.0 이하의 수치를 보

인 것은 未婚母의 자녀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으로 〈표 2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未婚母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는 성향이 50%로 가장 높다. 이는 일반적인 未婚母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태도에서도 함축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 표 29 〉 미혼모자녀의 건강관리 책임에 대한 태도

가중치	구분	표본수	백분율	평균
1	미혼모자신이 해결, 종교단체나 민간단체의 최소도움	400	50	
2	민간단체의 능력부족시 국가도움	184	23	
3	미혼모자녀의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120	15	
4	미혼모자녀 및 모든지동의 건강에 대한 국가책임	96	12	
합계		800	100	1.890

그러나 미혼모의 자녀뿐만이 아닌 모든 아동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민주사회주의 이상의 성향도 36%나 되는 것은 국가적 책임에 대한 강한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 (3) 아동복지의식과 관련된 변수

아동복지의식과 관련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의식이 각 변수별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ONE-WAY ANOVA 로 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이 결과〈표 3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教育程度, 職業에서 有意味한 차이를 보여 도시부모의 아동복지의식에 관계가 있는 변수임을 알수 있다.

〈표 30〉 성. 연령. 교육정도. 직업. 수입. 종교에 따른 아동복지의식에의  
차이유무검증의 ONE-WAY ANOVA 결과

변 수	변 량 원	자 승 화	자 유 도	평균자승화	F	PR > F	P
성	집 단 간	0.1136	1	0.1136	2.00	0.1580	N.S
	집 단 내	44.0491	774	0.0569			
	전 체	44.1628	775				
연 령	집 단 간	0.0133	4	0.0033	0.06	0.9938	N.S
	집 단 내	45.6770	795	0.0574			
	전 체	45.6903	799				
교육정도	집 단 간	0.9506	3	0.3168	5.61*	0.0010	P<.05
	집 단 내	44.9875	796	0.0565			
	전 체	45.9381	799				
직 업	집 단 간	1.2040	4	0.3010	5.63*	0.0002	P<.05
	집 단 내	33.1712	620	0.0535			
	전 체	34.3753	624				
수 입	집 단 간	0.2575	2	0.1287	2.27	0.1039	N.S
	집 단 내	42.1773	744	0.0566			
	전 체	42.4348	746				
종 교	집 단 간	0.4243	5	0.0848	1.49	0.1880	N.S
	집 단 내	43.7826	771	0.0567			
	전 체	44.2070	776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3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정도에서는 대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고졸과 중졸이 같으며 국졸이 가장 낮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 의식이 강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직업에서는 판매직이나 생산직보다도. 사무 행정·관리 및 전문직일수록 복지 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관련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가까울수록 복지 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여(金泳謨, 1980 a, 1986 b) 본 연구와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었다.

〈표 31〉 성, 연령, 직업, 교육정도, 종교별, 아동 복지의식

복지의식	구 분	표본수	평 균	복지의식	구 분	표본수	평 균
성 별	아 버 지	461	2.63	교육 정 도	국 줄	41	2.56
	어 머 니	315	2.66		중 줄	119	2.62
	계	776			고 줄	276	2.62
연령별	20 - 29세	25	2.66		대 줄	364	2.68
	30 - 39세	329	2.64		계	800	
	40 - 49세	384	2.64	수 입 별	40 만원이하	300	2.63
	50 - 59세	57	2.65		40 ~	263	2.67
	60 - 69세	5	2.62		80 만원사이	184	2.62
	계	800			80 만원이상	184	2.62
직업별	전 직	225	2.69	계	747		
	행정 관리	73	2.65	종 교 별	기 독 교	235	2.65
	사 직	106	2.67		불 교	183	2.65
	판 직	118	2.58		원 불 교	4	2.50
	생 직	103	2.60		유 천 주 교	18	2.57
	계	625			무 교	102	2.67
			무 교		235	2.62	
	계	625		계	777		

## 5. 論義 및 結論

지금까지 본 조사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복지 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인 순서대로 이념적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관련연구와의 검토를 통하여 객관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하여 세가지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동시에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부언하며, 마지막으로 결과를 요약,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논의되어져 온 한국적 복지 모형의 구축이란 과제에서<sup>4)</sup>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의 일 영역으로서 그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아동은 일정기간동안 自求的 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특성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 민주사회주의의 복지모형을 원하는 우리나라 부모의 요구는 어느정도 정당성을 가지며, 또 이러한 요구가 과연 정책적으로 수렴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복지가념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民主正義黨, 1982)

둘째, 관련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종합적인 복지 의식은 자유민주주의에 가까운 사회민주주의로 나타났으나 복지의 세분된 영역에서는 의식수준의 편차가 심하다는 점으로(金尙均, 1985)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아동복지영역에 따라 복지 의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동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및 福祉主體의 선정에서 시사받는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복지이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정책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운영의 묘미가 함께 요청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동복지의식과 관련있는 변수로는 교육정도와 직업으로 나타났다.

관련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재산, 직업 및 계층별 분석에서 개괄적인 흐름은 살펴 볼 수 있었으나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보고(金泳謨, 1986 c)와 비교해 보면, 교육수준과 직업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연령이나 재산, 계층등에서는 유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서울이라는 도시에 한정되었으므로 한국 도시부모의 아동복지

의식으로 一般化시키기엔 부리가 있다. 따라서 準都市 및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며, 더불어 더욱 효율적이며, 요구에 대응한 아동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밀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연구가 한국 아동복지정책 모형의 구축이라는 대전제하에서, 그 기초가 되는 부모의 아동복지의식수준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규명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에 의해 개괄적인 윤곽을 제시하고, 정책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 도시부모의 아동복지의식은 자유민주주의에 가까운 민주사회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

② 한국 도시부모의 아동복지의식과 관련

註 4) 한국적 복지이념의 모형구축이라는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국민의 복지인식수준은 자유방임형이나 이들이 원하는 복지모형은 민주사회주의 성향으로서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이상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점차 제도적 복지모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金泳謨, 한국사회복지의 제문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6. p 67)
2.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민간주도의 복지모형은 한국적 현실에서 自生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국가적 개입이 요청된다.  
(金尙均, 민간주도형 복지모형, 사회복지연구 제 15집, 대구대학 사회복지연구소, 1987. p10)
3. 그렇다고 국가주도적인 복지모형은 한국의 현정이념에 나타난 복지이념과 재정적 현실로 인하여 혼란과 역부족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능적으로는 産業주도형의 복지모형이 적당하다  
(禹在賢, 산업주도형 복지모형, 사회복지연구 제 15집, 대구대학 사회복지연구소, 1987. p14)

있는 변수는 교육정도, 직업이며 성, 연령, 수입, 종교등은 유의미하지 못했다.

③ 변수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가까울수록 높은 복지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시부모들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 자유경제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아동복지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개입과 그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성향은 부모의 교육수준 및 직업과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 참고 문헌

- 金瓊姬. (1984). 주택 환경이 아동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주택. 대한주택공사. pp59-63
- 金尙均. (1983). 이대올로기에 비추어 본 사회정책의 유형구분. 사회복지 76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pp42-43
- \_\_\_\_\_ (1985). 한국대학생의 복지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과학과 정책 연구 제 7권 4호. pp89-109
- \_\_\_\_\_ (1986). 민간주도형 사회복지모형. 사회복지연구 제 15집.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pp21-35
- 金成天. (1984). 가족정책의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pp31-37
- 金泳護. (1980). 한국인의 복지의식. 일조자. pp2-5, p109
- \_\_\_\_\_ (1982). 현대사회정책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 \_\_\_\_\_ (1986 a). 韓國靑少年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pp122-123
- \_\_\_\_\_ (1986 b). 도시민민의 복지 의식과 그 의미. 사회복지학 제 1집 한국사회복지학회. p16
- \_\_\_\_\_ (1986 c). 한국사회복지의 제문제.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p66
- 金英玉. (1985). 우리나라 사립국민 학교의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pp37-43
- 민주정의당. (1982). 정의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심포지움 보고서
- 서울대 환경대학원. (1980). 서울시 불량주택지구와 주거실태 및 어린이문제에 관한 연구. p131
- 任淑宰. (1985). 취업모의 Day Care 요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p.41.
- 張仁協 (1985). 아동복지론. 서울대출판부. p212
- 鄭範護. (1987). 한국교육 이대로 좋은가. 조선일보 (5.3일자)
- 張英姬, 李素希. (1982). 영유아 단체양육에 관한 일 연구. 아동학회지 제 2집 한국아동학회. pp. 1-15.
- 李 映. (1986). 전문직 취업모의 자녀관리 현황조사. 아동학회지 제 7권 1호. 한국아동학회. pp1-23
- 韓國教育開發院. (1983). 유아교육의 정책과 발전방향 pp99-100
- 洪斗承. (1983).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5권 3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72-79  
 원석조. (1981).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평화사.
- 禹在賢. (1987). 산업주도형 복지모형. 사회복지연구 제 15집.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pp39-75
- 尹正一外. (1980). 교육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95
- 李海變. (1984). 한국형 복지이념의 정립을 위한 시론.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李相春外. (1980). 한국특수교육의 개선을 위한 종합실태조사. 특수교육연구. 제 8집. 한국사회사업대학 특수교육연구소. p85
- 李承陽. (1982). 도시빈곤아동의 복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pp39-53
- 李堯京. (1984). 복지 Stigma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p56
- 人口問題研究所. (1984). 인구문제론집, 제 25호. pp2-30
- 朱貞一, 李素希. (1984). 아동복지학, 교문사. P37
- Higgins, J.(1981). State of welfare, Oxford; Basil Blackwell & Martin Roberston.
- Thones, P. (1966). The elite in the welfare state, Faber & Faber, p134
- Marshall, T.H. (1976). The Right to Welfare, In N. Firms & D. Watson (Eds.) Talking about welfare. Kegan Paul.